

# 민주, 과반 내준 '19대 총선의 악몽 부각' 재현 우려 고조

### 민주당, 총선 40여일 남겨 두고 지지율 하락세 고전 정권심판론 안주·공천 갈등에 패배한 19대 총선 회자 공천 과정서 계파 갈등 최고조...대규모 탈당 우려도 이재명, 불출마·사퇴 주장 일축...당내 비판 정면 돌파

4·10 총선에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의 악몽이 부각되고 있다. 당시 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은 19대 총선에서 '이명박 정부 심판론'에 안주해 공천 과정에서 계파 간 파열음을 내다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에게 과반을 내줬다.

당내에서 2012년 패배가 회자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천 논란으로 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 이번 총선이 19대 총선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피지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정권전환이 우세한 상황 속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고전 중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2월

2주차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도는 1년 만에 1%포인트(p) 이내로 좁혀졌다. 국민의힘은 40.9%, 민주당은 41.8%를 기록했다.

지난 19일 발표한 2월 3주차 조사에서도 양당이 동시에 소폭 하락했지만 비슷한 격차를 유지했다. 국민의힘은 39.1%, 민주당은 40.2%로 집계됐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민주당 회복세를 보였지만 국민의힘에 뒤졌다. 23일 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상대로 정당 지지도 조사를 벌인 결과 국민의힘은 37%, 민주당 35%, 녹색정의당 2%, 개혁신당 3%, 새로운미래 1% 무당층 20%로 나타났다.

전주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4%p(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과 녹색정의당은 변동이 없었

다. 개혁신당의 경우 지난주 4% 지지율이 통합 파기 후인 이번 조사에선 개혁신당 3%, 이낙연 신당인 새로운미래 1%로 지지율이 갈라졌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권심판론이 높음에도 민주당이 고전하는 양상은 19대 총선과 닮았다.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은 2011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물러나고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후보인 박원순 후보가 승리하면서 기세를 올리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실망감은 정권심판론으로 이어졌고 민주통합당의 과반 차지가 유력하게 점쳐졌다.

하지만 선거 결과 새누리당이 152석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민주통합당은 127석을 얻어 패배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총선 패배 책임을 지며 취임 3개월 만에 사퇴했다.

당시에도 문제는 공천 논란이었다. 한 대표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친노, 반노, 비노 이런 구도는 언론에서 만든 분열적인 수사다. 민주당은 모든 사람이 친노"라고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친노 486이 중심이 된 계파 위주 공천이 이뤄지면서 비주류였던 구 민주계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구 민주계는 공천에서 배제되자 '구

민주계 학살론'을 들고 일어났다. 결국 구 민주계 일부가 당을 떠나 정통민주당을 창당하면서 당이 분열됐다.

반면 위기에 처했던 한나라당은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했다.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없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직접 중진들의 용퇴를 이끌어냈다. 또한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 이준석 비대위원을 영입하고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는 등 고강도 쇄신에 나섰다. 당명도 새누리당으로 바꿨다.

19대 총선 민주통합당과 22대 총선을 앞둔 민주당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명(비이재명)계 송갑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2대 총선은 도저히 지기 힘든 선거다. 그런데 이것이 흔들리고 있다"며 "2012년 19대 총선이 데자뷰처럼 떠오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천 논란으로 계파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비명계는 밀실 회의, 현역 이름이 빠진 여론조사, 하위 20% 심사 공정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천 과정에서 탈당 선언도 나왔다. 4선 중진 김경주 의원은 하위 20% 대상 통보에 "모멸감을 느꼈다"며 탈당했다. 이수진 의원도 자신의 지역구가 전라지역으로 결정되면서 컷

프(공천 배제)되자 탈당을 선언했다.

공정성에 의심을 품고 있는 비명계가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또한 공천에서 탈락한 비명계 의원들이 제3지대로 이탈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비명계의 대규모 탈당으로 분당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공천 국면에서 벌어진 혼란을 수습하고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이 대표의 불출마를 포함해 2선 후퇴 주장이 제기된다.

하지만 이 대표는 자신을 향한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공천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하면 사퇴하라는 소리를 하는 분들이 계신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사퇴하면 1년 365일 내내 대표가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결국 총선 결과로 책임을 지는 건 이 대표"라며 "이대로라면 이 대표도 죽고, 당도 죽는다. 지지율 반전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죽어야 당이 산다"는 논리다.

김희면 기자

## 이재명 "의사는 파업 멈추고 정부는 '진압쇼' 중단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의사들이 집단 반발을 이어가는 것과 관련 "의사는 파업을, 정부는 진압쇼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사와 정부는 파업과 강경대응을 중단하고, 즉각 대화에 나서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

"의대 적정 증원 규모 4~500명선...대화로 해결 가능해"

능한 적정 증원 규모는 4~500명선이라고 한다"며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 문제인 정부 당시 이미 공공·필수지역 의료 중심으로 4~500명 규모 증원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타진해 본 결과, 충분한 소통과 조정이 이뤄진다면 의료계도 이 정도 증원은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파업과 진압이라는 사회적 혼란 없이 얼마든지 대화로 해결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부러 2000명 증원을 들이밀며 파업 등 과격반응을 유도한 후, 이를 진압하며 애초 목표인 500명 전후로 타협하는 정치쇼로 총선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시중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의료계와 국민의 피해를 담보로 정치적 이익을 쫓는,

양평고속도로나 채산병 사건을 능가하는 최악의 국정농단 사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의료계를 향해 "파업 그 이상을 해도 의대정원 확대는 피할 수 없고, 의사파업은 국민의 관점에서 용인하기 어렵다"며 "의사들은 파업을 중단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했다.

또 "말로 해결될 일에 주먹 쓸 필요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파업이나 강경진압 없이 대화로도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며 "대화든 파업과 강경진압이든 어느 경로를 거쳐도 결과는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권의 무능으로 경제는 폭망인데 정권이 사회 혼란까지 부른다"며 "지금도 이 모양인데, 이번 총선으로 국회와 입법권까지 차지하면 무슨 일을 벌일까 걱정돼 잠이 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선욱 기자

## 나주시의회, 버스노선 불편 사항 토론회



나주시의회(의장 이상만)는 오는 29일 14시, 나주시청 대회의실(2층)에서 '2024년 제2회 나주시의회 다함께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0월 전면 개편되어 시행 중인 버스 노선에 관한 생각을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다함께토론회는 지난 6일 개최하였던 제1회 다함께토론회와 마찬가지로 형식에 구애 받지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않고 시민이 직접 토론자가 되어 개편된 버스 노선에 관한 의견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나주시의회는 평소 의회에 접수된 버스 노선 관련 불편 사항과 토론회에서 논의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부에 전달받은 물론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상만 의장은 "대중교통 정책은 시민 편의를 공공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대중교통이 시민에게 든든하고 편한 발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의회 전체 의원들은 지난해 10월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노선 개편 실태를 조사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역별로 개편된 시내버스를 이용해 나주 전역을 둘러보는 민생 중심의 현장 활동을 펼친 바 있다.

나주=송준표 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